

민주 2호 쇄신안은 ‘꼼수탈당 근절’... 복당 벌칙 강화

비위 의혹 인사, 징계 절차 전 자진 탈당 방침 이번주 발표 혁신위원 3명 추가 인선 쇄신 작업 박차...공천 혁신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이번 주 내에 ‘꼼수 탈당’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당내 결집을 촉발하는 공천 혁신안이 제시될 것인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혁신위가 이번에 내놓는 ‘꼼수 탈당 방침’은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내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거역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역시 스스로 당을 떠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일단 당헌·당규의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과 이진·박성진 교수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 외부 인사 8명과 민주당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를 완성한 혁신위는 이번 주부터 전방위적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안에 ‘민주당 혁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받는 게시판 형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또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강경성향 일부 권리당원이 주로 활동하는 만큼 혁신위 홈페이지를 일반 국민과의 소통 채널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혁신위 내부에 여러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별 전문성에 맞춘 심층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이번 주에는 꼼수 탈당 문제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공천 혁신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강경 드라이브’로만 계속 가다가는 활동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 의원 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상의 무장해제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1호 쇄신안부터 당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는 점을 고려하면, ‘대의원제 수정·폐지’ 문제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년 총선 공천 혁신안은 당분간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천 혁신 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당내 소통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공감을 통한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 등을 과감히 시행하는 한편 팬덤 정치의 폐해를 막는 혁신안 제시 등을 통해 당내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민주묘지 찾은 이낙연 전 대표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박관현 열사 묘소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낙연 “정부, 폭주 멈추고 각성해야” 비판

2박3일 호남 방문 5·18 민주묘지 참배...민주당엔 ‘혁신’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에는 국민 눈높이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안팎의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당에서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3일 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전남 고흥인 영광을 찾아 선전 묘소를 성묘한 데 이어,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하고 재야 원로 등을 면담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추미애 “文대통령 요구로 장관직 물러나”

유튜브서 법무장관 사퇴 과정 답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이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에 대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

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으며 “절 유입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유입 주장을 폈느냐는 취지의 말엔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레드 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냐”라며 “검찰 국가의 탄생

을 아무도 못 막는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엔 “그 ‘헛들랑’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정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채용 비리 의혹’ 경찰 출석

국정원장 재임 기간 연구위원 2명 추천...8시간 조사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 등 2명을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 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0일 국정원장 시절 전

박연에 측근을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또 서 초구 내국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채용비리와 별개로 2021년 6월 국정원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날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